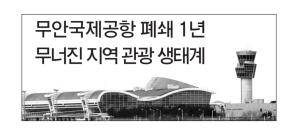
'캄캄한' 관광업계 …'불 꺼진' 지역 상권



〈2〉 공항 불만 꺼진 게 아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된 뒤 지역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벌써 337일째(12월 1일 기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여행객을 맞아왔던 공항 내 상업시설, 주변 식당·숙박업소, 전세버스 운영자들 은 '공항 폐쇄 직격타'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기 위 한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불 꺼진 무안공항 내부=비행기가 멈춰서면서 공항 불도 꺼진 지 오래다.

출국장 내 면세점을 비롯해 공항 상업시설 전부가 사실상 휴업 상태다. 사고 직후 1월 말까지는 공항 내 식당 1곳과 카페 1곳이 한시적으로 영업했지만, 이마저도 1월 26일부로 문을 닫았다.

2019년부터 출발격리대합실(출국장) 내 '미미 치킨&버거'를 운영해 온 김현옥씨는 "이용객이 '0명'인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며 직원 6명이 전 원 해고됐다"며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이렇게까 지 오래 매출이 0원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장비는 1년 넘게 방치돼 있고, 곧 개 항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던 직원들도 결국 모두 포기했다"며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정말 캄캄하다"고 했다.

◇공항 주변 관광산업도 붕괴=공항 인근 상권은 벼랑끝에서 흔들리고 있다. 공항 효과를 가장 직접 적으로 누려온 무안군 망운면 식당·카페들은 매출 급감의 피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항 면세점·상업시설 휴업 인근 식당·카페 등 손님 발길 뚝 숙박업소도 객실 텅텅 "죽을 맛" 전세버스업계 매출 30~40% 급감 벼랑 끝 버티기 한계 속 고사 위기 337일째 SOS에도 정부는 무관심

공항 인근에서 낙지 직판장을 운영하는 이근영 (49)씨는 "예약 손님 중 30~40%가 공항 이용객이 었는데 사고 이후 매출이 월 평균 6000만~7000만 원대로 줄었다"며 "이전 상반기 평균 매출이 1억 원을 넘겼던 걸 생각하면 사실상 생계가 무너진 거다"고 토로했다.

망운면에서 또 다른 수산식당을 운영하는 민남숙 씨도 "공항에서 4 km 거리라 비행기가 내릴 때마다 단체 손님이 한꺼번에 몰렸는데 지금은 손님이 참 사 이전에 비해 40~50% 줄었다"며 "지금 공항 근처식당들 다 깡통 차게 생겼다"고 했다.

공항에서 4여㎞ 떨어진 곳에서 운영 중인 카페 '무안879'는 주말마다 30~40분 대기줄이 늘어서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손님 한 명 찾기도 힘들어졌 다

한 때 직원 7명을 두고도 손이 모자랐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3명만 남았다. 직원 A씨는 "비행기시간을 기다리던 여행객들이 풀빌라에 묵으며 카페를 들르는 흐름이 완전히 끊겼다"며 "우유 납품량도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었다. 납품 기사도 덩달아울고 있다"라고 말했다.

숙박업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외국인 패키지 여 행객 의존도가 높았던 무안공항 반경 5분 이내 숙 소들을 중심으로 매출 타격이 극심한 상황이다.

망운면에서 21년째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김영 호씨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딱 '죽을 다.,이나그 했다

공항 폐쇄 전만 해도 일본·중국·동남아 여행객이 몰려 객실 31개가 3~11월 내내 만실이었는데, 이 제는 여행객은커녕 국외 출장객도 없어 방이 텅텅 비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결국 직원 3명을 유지하 지 못해 모두 내보내고 아르바이트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공항 10분 거리에서 무안 톱머리리조트를 운영해 온 서석진(34)씨 역시 "골프 시즌마다 수도권·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던 손님들이거의 사라져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다"며 "객실점유율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하늘길이 끊기니 육상 교통도 위기다. 30년째 버스업을 해온 나승채 광주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은 "무안공항 폐쇄 이후 비수기 매출이 30~40% 급감했다"며 "버스 한 대가 현상 유지를 하려면 한 달에 적어도 5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나씨는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또 3억 원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사고 이전 하루 20회를 오가던 목포·광주~무안 공항 고속버스 노선은 이미 6개월여 전 모두 중단 됐고 군내버스 역시 수요가 줄자 공항 경유 노선 대 부분을 제외했다.

캄보디아 사태 한 달 만에 "여행·관광업계 90%가 죽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관광 업계에서는 "우리는 벌써 1년 째 그런 사태를 겪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의 무관심에 야속함을 드러냈다.

박일상(76) 무안공항활성화위원장은 "밤비행기이용객이 많아 야간 시간대 공항 근처 식당과 카페가 붐볐는데 지금은 그 상권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추모권을 지키면서도 공항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무안국제공항 폐쇄 직격타'를 맞고 쓰러지지 않기 위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항 이용객이 사라지며 손님이 끊긴 무안군 망운면 숙박업소(위)와 식당.

제주항공 참사 사조위 공청회 강행 반발 유가족들 삭발·밤샘 노숙농성 돌입키로

독립된 기구 신설 조사 촉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 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공청회 강행에 반 발, 삭발과 밤샘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1일부터 4일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삭발 및 밤샘 노숙농성에 돌입할 방침 이라고 30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오는 4일부터 이틀 간 서울 글로벌센 터에서 사고조사공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 유가 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앞서 중간 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된 사례를 볼

때, 사조위가 새나 조종사 과실로 참사 원인을 떠넘 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유가족들 주장 이다

유가족들은 또 국토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구를 신설해 참사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사조위는 항공·철도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부 소속인 만큼,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사조위는 1년 동안 국제 규정을 운운하며 유가족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 다 공청회를 강행하고 나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 하나, 국토부의 손을 벗어난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라 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전남대 '대학원생 갑질 사망' 연구교수 해임…지도교수는?

총장 공식 사과도 없고 지도교수 징계 차일피일 미뤄 학교측 "이달 중 징계위 열고 결론"

전남대가 '대학원생 갑질 사망 사건' 〈광주일보 7월 17일 6면 등〉 가해자인 연구교수를 해임했 다.

다른 가해자 지도교수(정교수)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데다, 학교 내 학생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전남대 총장의 공식 사과 도 없는 상태다.

전남대는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학원 생 A(24)씨에게 갑질을 한 계약직 연구교수(박 사)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 다. B씨는 올해 연말까지 계약돼 있었으나, 계약 기간 한 달을 남기고 해임됐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A씨에 대해 권한 남용,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 및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교원이 고의로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비위를 저지를 시 최소 해 임,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전남대는 그러나 지도교수 C씨에 대해서는 지 난 10월 30일 직위해제한 이후 아직까지 징계 여 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C씨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며 "12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결론을 낼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관련자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 도중 "올해 안에 (교수에 대한) 징계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고약속한 바 있다.

교수에 대한 갑질·대학원생 인권 침해, 관련 시 스템 미흡 등이 드러난 만큼 전남대가 총장 명의 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통한 학교 인권 시 스템 확립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유족 측은 "학교 차원에서 사과문이나 입장문을 공개할 경우 유족들도 대학에 요구할 사안들을 검 토,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강요와 사기 혐의로, C씨를 직권남용,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